

특별지자체 3대 개편 방향 집중 논의

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실효성 갖추기 위해
재정·조직·사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재정·조직·사무 3대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 단위 협력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초지자체 실행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특별지자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대표적 광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재정지원 제도화 미비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의회 및 자치입법 기능의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지자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므로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지원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 분야에서는 인력 대부분이 구상 지자체에서 과전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성 및 행정 연속성이 약화되고,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전 인력의 별도 정원 전면 인정,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상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 분야에서는 현재 최소한의 운영체제만 갖춰져 있어 실질적 의정활

동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의정활동비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무 분야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사무범위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 확대와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전북대 하동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전북연구원 김재구 선임연구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 팀장,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 김홍주 팀장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지원,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참여단체별 책임 배분 등 실행 가능한 개

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개선 과제가 뒷받침될 때 특별지자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이 강화되고 구성 지자체가 체감하는 실질적 이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가 지역 간 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이번 논의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구성 지자체가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생산 아시아 공장 새만금 유치 나서

민주 안호영 의원, 보베어 아시아 생산기지 검토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축산 분야 메탄 감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 DSM-Firmenich의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보베어(Bovaer)' 아시아 생산공장을 새만금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한 온난화 효과를 가진 온실가스로, 전 세계 온난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감축 대상이다. '보베어'는 젖소·육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기술로, 65개국에서 승인됐으며 국내에서도 작년 9월



사료첨가제로 허가됐다.

DSM-Firmenich는 국내 기업 제이디인 터내셔널과 함께 아시아 공급거점 구축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이 1순위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공장은 1차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수천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DSM-Firmenich 아태지역 책임자와 만나 공장 설립을 협의했으며, "글로벌 녹색기술기업 유치는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등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녹색축산과 기후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도의장,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금고운영 제도 개선 '앞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

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에너지·복지·국책사업 등 현안 다채”

도, 1~5일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햇빛 나눔 협약·전북 소비자대회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12월 1~5일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전북자치도의 현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철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정책, 복지 지원, 국책사업 발굴, 스포츠 외교 등 다양한 현안이 한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일에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을 활용하는 '햇빛 나눔' 업무 협약식이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포인트로 적립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 3년간 3,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12월 2일에는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제28회 전북 소비자대회가 개최된다.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소비자 관련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열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두 건의 심의 의안과 함께 RE100 참여 기업 지원 종합계획이 보고될 예정이다.

12월 3일에는 전주 왕의지미에서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함께 참여한 도정의 시·군,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도정 주요정책 보고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 시상 등이 진행되며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12월 1~5일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어진다. 같은 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단의 정례 브리핑도 개최된다.

12월 4일에는 도의 스포츠 외교 행보가 예정돼 있다. 도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 챔피언십 일정에 맞춰 스포츠 외교 홍보단과 함께 현지 방문에 나선다. 나이로비 출장에는 도 관계자와 홍보단 '싸울아비팀' 등이 참여하며,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익산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가 함께 열리며, 오전에는 장수 번암면 죽림정사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이 진

행된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법륜 스님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12월 5일에는 4층 종합상황실에서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2027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비롯해 중장기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각 분과별 전략 모델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한문철TV'와 DB손해보험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물품 기탁식이 도청 현관에서 진행된다.

전북도는 이번주부터 내년도 실·국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며, 내년 1월 초 시군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기본소득당 도당, 전북 귀농귀촌연합회와 '맞손'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철호)과 전북자치도 귀농귀촌연합회(회장 정용준)가 '농어촌기본소득·귀농귀촌 정착지원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와 캠페인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출산·양육 정책서 청년들과 공감대 형성”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과 양육 정책에서 청년세대와 공감대 형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남원시 출생 인구가 2014년 569명에서 2024년 276명으로 10년 사이 49%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식변화와 경제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의 성장 기간을 도와주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남원시만의 특색있는 정책 발굴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보다는 남원시만의 선도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인구정책 및 첫아이 출산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가정의 행복이며, 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이 된다고 주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만금공사 “수변도시 침수·지반 안전성 충분히 확보”

새만금 수변도시의 침수와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 검증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해명 자료를 통해 “수변도시가 최대 홍수위를 검토해 단지계획고(+2.65m)를 새만금호 관리수위(-1.50m)보다 4.15m 상향했고, 제방 높이도 관리수위보다 4.80m 높였다”며 “부지 전체 구간의 연약지반 검토 후 제방, 도로, 단지 등

에 연약지반처리공법(PBD 등)을 적용해 지반침하에도 대비했다”고 했다.

앞서 27일 새만금상시해수유동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변도시가 홍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류, 매립지 지반 침하, 지진 취약 지반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지반 침하와 지진, 홍수

등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제방, 교량 등 시설물은 내진 1등급 기준(1000년 재현 주기)으로 설계됐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적용했다”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 검토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만호 기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수상

문승우 도의회 의장 '특별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문 의장은 지난달 28일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위민의정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발췌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격려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와 의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문 의장이 받은 특별상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모범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설

된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자치연구소(주)는 “문승우 의장이 의회의 대표자로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방의회 위상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항상 현장에서 함께 뛰어난 동료 의원들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여러분께서 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에”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박정규 도의원, 광역의원 부문 '우수상'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소방활동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최초로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소방관의 법적 분쟁 위험 감소, 심리적 안정

감 확보, 전문적·체계적 법률지원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도민 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소방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동료 의원들과 관계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